

2018년도 문재인 정부
7대 퍼주기 100대 문제사업
(요약)



정 책 위 원 회

I. 주요 문제사업

1

일단 퍼주고! 세금 올리고! 국민 올리는
문재인 정부 7대 퍼주기

[퍼주기 1] 공무원 증원 평평! 나라곳간 탈탈

□ 내년도 예산현황

○ (행안부 등)공무원 증원 관련 인건비 등 : '18예산안 5,349억원

- 1.2만명 증원 : 인건비(4,304억원), 공무원연금(366억원), 건강보험(134억원),
채용비용(161억원), 훈련비용(384억원) 등

○ 공무원 증원계획(17.4만명) 및 재정소요 전망

- 총 17.4만명중 국가직 8.0만명, 지방직 9.4만명

구 분	'17년 추경	'18년	'19~22년	합 계
국 가 직	2,575명	12,221명	60,800명	8.0만명
지 방 직	4,500명	15,200명	70,800명	9.4만명
소 계	7,075명	27,421명	131,600명	17.4만명

※교원은 국가직이나 재원상(교육재정교부금) 지방직으로 분류

< '17년 추경 · '18년 정부안 국가직 공무원 증원 >

'17년 추경 : 2,575명 ▶ 500억원 (목적예비비)	'18년 정부안 : 12,221명 ▶ 5,349억원 ('17년 추경인원분 포함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찰 1,104명 • 군부사관 652명 • 근로감독관 200명 • 인천공항 2단계 개항인력 537명, •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(AI) 관리예방 82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찰 2,779명 • 군부사관·군무원 3,948명 • 행정부 5,192명 • 헌법기관(대법원 등) 302명

-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

(단위 : 조원)

	'18	'22	'18~'22	~'50 (누적)
공무원 증원	1.0	6.4	17.8	327.8
최저임금	3.0	10.1	39.8	322.6
건강보험	3.7	8.1	30.6	318.9
기초연금	1.7	5.3	16.7	357.3
아동수당	1.1	2.2	9.6	93.5
합 계	10.5	32.1	114.5	

○ 재정파탄 그리스와 판박이 행보

- 그리스: ('01) 69만명 ('07) 88만명 / 6년간 +18.6만명
- 한국: ('17)127만명 ('22)146만명 / 6년간 +18.6만명

○ 재정추계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미래세대에 부담만 가중

- 추경심사시 부대의견에 공무원 증원관련
 “공무원 추가채용(2,575명)과 관련된 경비는 근무연한·퇴직후 연금부담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재원소요계획(인건비·관련경비·사회보험료·연금부담 등)을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”

○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증원

- 생산가능인구 '16년 3,760만명→'50년 2,590만명(△31%, △1,170만명)

[퍼주기 2] **최저임금 UP! 내 세금도 UP!**

□ 내년도 예산현황

- (고용부)최저임금(일자리안정자금) : '18예산안 2조9,708억원(순증)
 - 전세계에 유례도 없고 국가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불명확
 - ※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 지원(30인 미만 기업의 최저임금 120% 이하)

<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된 31개 법률중 대표적인 사업 현황>

- (고용부)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: '17예산 5,202 → '18예산안 7,021억원 (+1,819억원)
 - ※ 지원대상 월보수 140만원미만 → 160만원미만으로 기준 확대
- (고용부)구직급여 : '17예산 5조3,351 → '18예산안 6조1,572억원 (+8,221억원)
 - ※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구직급여 인상분 반영
- (고용부)모성보호육아지원 : '17예산 2,844 → '18예산안 2,993억원 (+149억원)
 - ※ 출산전후휴가급여, 유산·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(150→160만원)
- (고용부)산재보험급여 : '17예산 60 → '18예산안 51억원 (△9억원)
 - 직업훈련수당 1일 지급액(최저임금 상당 금액) 인상(4,188 → 4,703천원)
 - 다만, 수급자 감소(1,364→ 1,083명)로 예산 총액은 감소

-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

(단위 : 조원)

	'18	'22	'18~'22	~'50 (누적)
최저임금	3.0	10.1	39.8	322.6

[퍼주기 3] **건강보험** 세금하마 **자녀세대** 부담백배

□ 내년도 예산현황

- (복지부)건강보험가입자지원 : '17예산 6조8,764 → '18예산안 7조3,049억원(+4,285억원)
 - '18년 문재인케어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3.2조원 추가 필요하나, 국가지원금은 전년대비 4,285억원만 증가
 - 문재인 건강보험의 주요내용
 - 건강보험 보장률 2015년 63.4%→2022년 70% 수준 확대 (3,800개의 비급여 항목 급여화)
 - 재원대책 : 건강보험 적립금 10조원, 보험료 평균3.2% 인상, 국고지원
 -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

(단위 : 조원)

	'18	'22	'18~'22	~'50 (누적)
건강보험	3.7	8.1	30.6	318.9

- 문재인 건강보험은 재정대책없는 허구
 - 보험료 3.2%인상시 2026년 건강보험 고갈(예산정책처 분석)
 - 보험료 대폭 인상 또는 국민세금 추가투입 불가피
 - ▶성상철 국민건강보험 이사장(국감발언)

“3.2%는 지난 10년간 건강보험료 (인상) 평균, 3.2%만으로 부족하다”

[퍼주기 4] 일단 퍼주자 기초연금

□ 내년도 예산현황

- (복지부)기초연금지급 : '17예산 8조0,961 → '18예산안 9조8,400억원(+1조7,439억원)
 - 기준연금액 5만원 인상(20.6→25만원), 향후 정확한 재정추계 미제출
 - 문재인 기초연금의 주요내용
 - 1단계 2018년 4월 현행 20.6→25만원, 2021년 25→30만원(5만원 추가인상)
 -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

(단위 : 조원)

	'18	'22	'18~'22	~'50 (누적)
기초연금	1.7	5.3	16.7	357.3

- 정책적 방향성은 동의하나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요예산 재추계 필요
- 노인부양률 2050년에는 100명당 71.5명
 - 2015년 100명당 19.6명→2050년 71.5명→2075년 80.1명
- 기초연금 관련 자유한국당 · 정부여당 비교

구분	자유한국당	정부여당
대상	○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하위 70% - 2018년 500만명(738만명 중)	○ 좌동
금액	○ 2018~22년 매년 2만원 인상	○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
소요 재원	○ 2018년 5,700억원 추가 소요 - 향후 5년간 13.2조원 추가 소요 (연 평균 2.6조원) 추가 소요	○ 2018년 2.7조원 추가 소요 - 향후 5년간 총 29.4조원 (연 평균 5.9조원) 추가 소요

[퍼주기 5] 법은 묻지마, **아동수당** 퍼주기

□ 내년도 예산현황

○ (복지부)아동수당지급 : '18예산안 1조1,009억원 (신규)

-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, 법적 근거 없음

※자녀장려세제(CTC) 중복지원(만18세 미만 대상 / '17년 5,428억원) 고려

-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

(단위 : 조원)

	'18	'22	'18~'22	~'50 (누적)
아동수당	1.1	2.2	9.6	93.5

○ 아동수당 관련 자유한국당 · 정부여당 비교

구분	자유한국당	정부여당
지급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위소득 이하 6세 ~ 18세 미만 아동 - 2018년 기준 *284만명(대상 인구의 50%) *중위소득 이하 인구 정확한 추계 어려워 대상인구의 50%로 가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호자 소득 수준 무관 0~5세 아동 - 2018년 기준 253만명
지급 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월 15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월 10만원

○ 기존의 자녀장려세제(CTC)와 중복성 해소 및 재정추계 검토 필요 비교

[퍼주기 6] 대놓고 **좌파 · 시민단체** 돈 챙겨주기

- (행안부)비영리민간단체 지원 : '17예산 71 → '18예산안 117억원 (+46억원)
※ 불법시위단체 지원 가능토록 '지방보조금 관리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)'개정('17.9.25)

[(행안부)혁신 읍면동 추진 관련 : 210억원(신규)]

-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추진 ('18예산안 206억원)
- 인건비 : 연봉 25백만원 200명, 연봉 30백만원 60명
- 혁신 읍면동 추진단 운영 ('18예산안 4억원)
- 국가재정법 제31조(예산요구서의 제출)시한에 요구되지 않은 사업
- (행안부)지역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 조성.운영 : '18예산안 92억원(신규)
- 운영인력 15명 인건비(3개소×50백×15명=2,250백만원)
- (행안부)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: '18예산안 140억원(신규)
- 시민참여 기획 및 공모 프로젝트
- (문체부)문화적 도시재생 사업(9개 사업) : '18예산안 45억원(신규)
- 문화재생 커넥터 고용(연봉 40백만원×15명=3,000백만원)
- (국토부)도시재생사업 : '17예산 2,162 → '18예산안 1조2,586억원(+1조424억원)
*도시재생사업지원 '17예산 33 → '18예산안 66억원(+33억원)
- 도시재생지원기구 인건비 9억 및 코디네이터, 활동가 활동비 8억 등

[퍼주기 7] **핵협박 북한정권** 퍼주기

○ 내년도 예산현황

< 2018년 남북협력기금 북한지원 예산 규모 >

- 전체 규모 : 총 1조 7,020억원 ['17년 대비 △2,688억원 (△13.7%)]
 - 사업비 : 1조 431억원 [+843억원]
 - 비사업비(기금간거래, 여유자금운용 등) : 6,589억원 [△3,531억원]
- ※ 정부는 2017년도에 민생협력지원 예산(2,316억원)으로 유엔을 통한 800만 달러 북한지원 추진

- (통일부)개성-신의주간 철도도로 개보수 : 1,000억원(신규)
 - ※경협기반(무상) : '17예산 1,389 → '18예산안 2,480억원(+1,091억원)
 -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대북 퍼주기
- (통일부)구호지원 : '17예산 4,486 → '18예산안 4,486억원(전년동)
 - 당초 요구는 3360억원이었으나 기재부에서 4486억원으로 1126억원 증액행위
- (통일부)민생협력지원 : '17예산 2,316 → '18예산안 2,310억원(△6억원)
 - 북한인권은 외면한 대북퍼주기 논란 우려
- (통일부)사회문화교류 지원 : '17예산 144 → '18예산안 129억원(△14억원)
 - 현상황에서 북한과의 사회문화교류는 부적절
- (통일부)개성공단 운영대출, 기반조성 : '17예산 347 → '18예산안 312억원(△35억원)
 - 운영대출과 기반조성사업 모두 집행부진
- (통일부)남북회담 추진 : '17예산 9.6 → '18예산안 8.6억원(△1억원)
 - 현상황 남북회담 실질적 미개최로 많은 불용액 발생
- (문화재청)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: '18예산안 3억원(신규)
 - 북한의 도발행위 지속 상태에서 남북교류 시기상조

2

보조금법·국가재정법 위반 등 법률 위반 관련 주요사업

- (문체부)국립 서계동 열린문화예술공간 조성 : '18예산안 2억원(신규)
 - 지자체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원칙에 위반
- (복지부)치매 안심센터 설치 : '18예산안 2,135억원(신규) (※'17추경 188억원)
 - 법적 지원 근거 미비

3

야당일 때 삭감주장, 여당일 때 증액주장 관련 주요사업

- (농식품부)국제농업협력 : '17예산 173 → '18예산안 651억원(+478억원)
- (산업부 등)원자력·신재생에너지 예산 관련(11개 사업)

4

정권 홍보 몰두·편법적 위원회 남발 관련 주요사업

- (행안부)광화문 1번가 : '18예산안 29억원(신규)
 -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지자체 보조사업

II. 주요 증액사업

문재인정부가 삭감한 예산, 자유한국당이 지켜내겠습니다

① 안보 최우선, 국방비 증액

□ 총예산 증가율 7.1% / 국방예산 증가율 6.9% (40.3→43.1조원)

○ 내년도 증액 2.8조원중 1.5조원(54%)가 급식비 등 일반 경비
(사병인건비 73%(0.8조원) 증가)

○ 국방예산을 전체예산증가율 수준으로 조정(+8,000억원)

- 북핵·미사일 대비 3축체제인 킬 체인(Kill Chain), 한국형
미사일방어체계(KAMD), 대량응징보복(KMPR) 체계에 필요한
예산을 우선적으로 증액

○ 전술핵 배치관련 용역비 등을 반영하여 구체화작업 착수

② 명예를 소중히, 어르신들 편안하게

○ 참전명예·무공영예수당 인상

- 참전명예수당 인상 (月 22만원 → 병장 월급 수준인 月 40만원)
○ 정부·여당: 월22만원 → 정부안 월30만원 (+1,663억원)
○ 한국당: 병장 월급 수준인 월40만원으로 인상 (+2,758억원)

○ 전국 경로당에 기존 냉난방비·전기료·쌀 + 냉온 정수기·청소도우미 추가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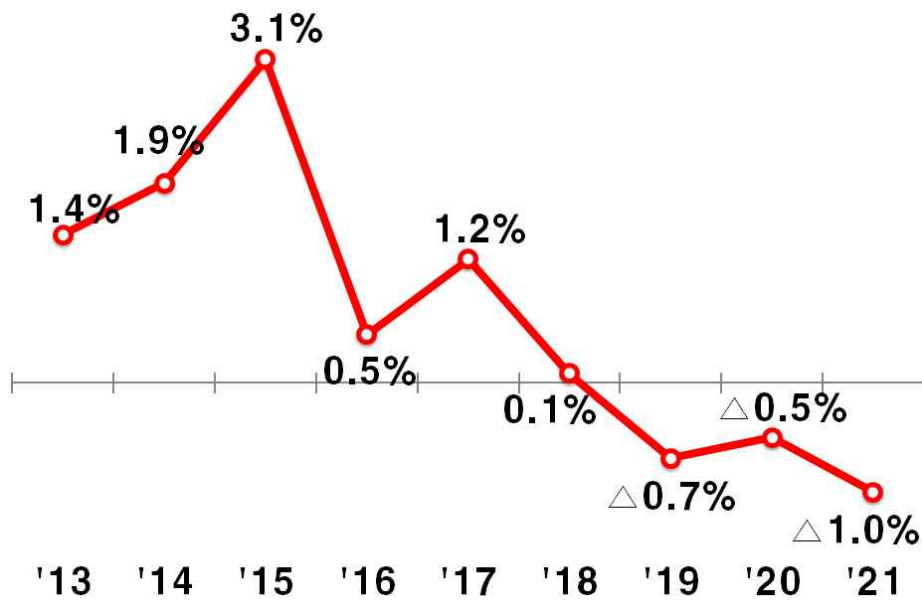
- 경로당 6만개소→6만3,000개소 지원 확대(315억원)

※ 현재는 개소당 쌀80kg기준이나 경로당 증가로 70kg로 축소지원

- 냉온 정수기(150억원), 청소도우미(250억원) 추가 지원 협의

③ 농업·소상공인 예산 증액

- 발농사·수리시설 개보수·소상공인 예산 증액
- 흘대받는 농업예산을 정상화
 - 전체예산증가율 7.1%, 농림예산은 고작 0.1%증가



- 발농업·농어촌공사 수리시설개보수 중심으로 증액 추진

④ SOC사업 정상화

- SOC는 농촌·도로·주택·관광·안전 복지임

□ 금년도 22.1조원 → 내년도 17.7조원으로 4.4조원(△20%) 삭감

- 감액된 4.4조의 예산 중 3.7조(84%)가 영남지역에 집중
- 건설투자는 경제 성장률의 60%, 취업자 증가의 43% 담당
 - 늘어나 일자리(36.3만명) 10개 중 4개가 건설 분야

<적정 SOC예산편성이 필요한 여덟 가지 이유 >

- 높은 취업유발계수 : 건설업 13.8명 > 제조업 8.6명
※생산유발계수 : 건설업 2.23 > 제조업 2.11
- SOC 취업유발계수: 건설업 14명 > 제조업 9명
- 건설업 잠재성장률도 마이너스($\Delta 0.5\%$) 전환
- 지역· 농촌 도로로 농비 절감, 농산품 출하 시간 단축
- 급행철도 신설로 출퇴근 시간 줄여주면 도로복지
- 거주인구 분산시켜 집값 내려주면 주택복지
- 오고 가기 힘든 산골 오지· 섬 연결하면 관광복지
- 노후교량· 부실축대 보수하면 안전복지

○ ‘말뚝의 눈물’ 닦아준 외레순 대교

- 조선업 붕괴로 인구 23만명, 외레순대교 건설 후 34만명
- 교통혁명: GDP 상승 / IT·에너지·식품 기업 진출 단일 경제권으로 재탄생
※외레순 대교 : 말뚝(스웨덴)-코펜하겐(덴마크)간 7.8Km 교각

□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

- 새마을이라는 명칭사용 환원
- 관련예산 최소한 전년수준으로 유지

□ 노후공공임대주택 개보수 확보

- ‘16년 310억원 → ‘17년 550억원(추경 300억원) → ‘18년 0억원

□ 신고리 5·6호기 공사중단을 전제로 한 원자력·신재생에너지 예산의 정상화

- 정부안은 신재생은 대폭 증액, 원전은 삭감 → 균형있는 정상화

(산업부)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: ‘17예산 1,000 → ‘18예산안 2,000억원(+1,000억원)

(산업부)원자력핵심기술개발(소듐냉각고속로) : ‘17예산 686 → ‘18예산안 621억원($\Delta 65$ 억원)